

전국 최대 공원면적 확보...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현장설명회
강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소통”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 2배 늘어
“교통문제 해결, 장애인 친화공간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원 조성 사업 현장 보고회를 열고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했다.

강 시장은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행정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사회 갈등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교통체증·부동산 투기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 서구 염주체육공원에서 중앙공원 1지구 공원사업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오해했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시간이 떠오른다”며 “광주에서 9군데의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중인데,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곳들은 모두 난개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각종 논란과 관련 “후분양-선분양-후분양으로 사업 방향이 변경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시민의 불신과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일었다”며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게 시민이 불신하는 가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서구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큰 이유라고 생각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면서 “세상에 고정불변은 없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공원조성사업 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공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시는 민간사업 특례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원면적

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평균 공원면적 비율이 80.1%인데 비해 광주시는 90.4%의 공원면적을 확보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의 수익 상한을 설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공원지구에서 광주시가 기부채납 받게 될 공공기여액은 토지·시설을 합산해 2조 89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조성

이 완료되는 2027년이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3㎡에서 12.3㎡로, 2배가량 대폭 늘어난다.

광주시는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원 조성 시기와 관련 “협약에 따라 공원을 먼저 준공해야만 아파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며 “공원면적이 워낙 넓어 주민 산책길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공원 조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려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요구가 주

요 관심사였다. 풍암호수공원 조성과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원 개발 및 아파트 신축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서구문화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 도로까지 추가로 길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 아파트 정문이 부영아파트 정문 쪽으로 설계돼 있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다.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과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충분히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정문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 재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앙공원 1지구에서 발생한 1300억원의 공공기여금 중 일부를 지하도로 개통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없다. 장애인 친화적 공간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 시장은 “장애인이 이용할만한 환경이 되는지 점검하고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게끔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병히 기자·나다운·박찬·윤준명 수습기자

‘영농철...농촌인력 수급 안간힘’

▶1면서 계속 일손돕기 대상 농가는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 고령·영세·장애인 농가 등으로 추진하는 농작업은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마늘 수확 작업과 과실 수거, 봉지 씌우기 등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농사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여러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돼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농촌인력중개센터, 계절근로자 수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함은 물론,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촌 일손돕기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첫 지정

직류 전력망 실증 플랫폼 구축
獨 프라운호퍼와 공동R&D 추진

전남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로 처음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부산(차세대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 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글로벌 혁신특구 4건과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 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을 심

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날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돼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특구 지정기간은 2028년 4월30일까지 4년이다.

나주시에 마련될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 관련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Yes, it's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